

올바른 선거 저널리즘을 위하여

특정인 편들기 · 엉터리 여론조사로 표심 왜곡 말아야



현창국 /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심의위원

보도 현장에서 나타나는 비윤리적인 행태를 바로잡자는 취지에서 시작했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가 적발해 제재한 사례들을 통해 무엇을 고치고,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 짚어볼 예정이다. 문제 사례들은 신문윤리실천요강을 위반한 전국 주요 일간지와 온라인 신문에 실린 기사들이다. 관련 규정을 위반한 광고들도 소개한다. 신문윤리위 소속 심의위원들이 번갈아 연재를 진행한다.



지역신문 상당수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오차 범위 내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면서 순위를 매겨 제재를 받았다. (출처-필자 제공)

후유증이 가장 심한 선거가 지방선거다. 광역 및 기초단체장과 의원, 교육감 등을 동시에 뽑다 보니 다양한 이해관계가 충돌하기 때문이다. 언론도 이에 휘말리곤 한다. 자극적이고 선정적이면서 불공정한 보도로 유권자의 불만을 산 탓이다. 유권자를 화나게 하는 보도는 우선 편파 보도다. 후보 선택에 필요한 정보는 제대로 제공하지 않고 여론조사 등의 사실을 왜곡 혹은 과장하는 보도에도

불만이 많다. 특정 후보를 부각하는 홍보성 기사, 여론을 왜곡하는 자의적인 판세 분석과 여론조사 결과 보도가 대표적인 유형이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런 유형의 보도가 잇따르고 있고, 언론에 부메랑이 돼 언론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

대선 이후 15개월간 119건 제재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이하 신문윤리위)는 19대 대선이 치러진 해인 2017년 1월 이후 올 3월까지 15개월 동안 119건의 선거 기사를 제재했다. 일간신문은 72건이고, 온라인 신문은 47건이다. 이 가운데 1건은 ‘경고’를, 나머지는 ‘주의’를 결정했다. 일간신문인 경우 제재를 받은 기사는 72건이지만 조항 위반 건수는 199건이다. 신문윤리강령 중 정확하고, 객관적이며, 공정하게 보도하도록 규정한 ‘보도와 평론’ 위반이 62건으로 가장 많았다.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 위반 59건, 신문윤리실천요강 중 사실의 전모를 충실히 보도토록 규정한 ‘보도준칙 전문’ 위반이 58건, ‘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위반이 9건, ‘표제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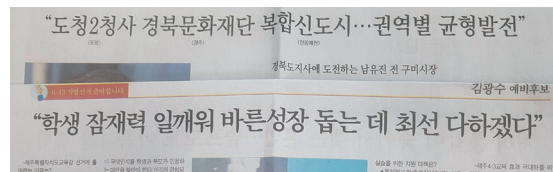
원칙’ 위반이 6건, ‘정치권력으로부터의 자유’ 위반이 3건, ‘답변의 기회’ 위반이 2건 순이다.

온라인 신문의 조항 위반 건수는 87건으로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 위반이 36건으로 가장 많고, ‘표제의 원칙’ 위반 25건, ‘보도와 평론’ 위반이 24건 순이다.

독자에게 대표적인 권언유착 사례로 비치는 것은 ‘특정인을 부각하는’ 기사다. 매일신문은 1월 29일자에 경상북도지사 출마 뜻을 밝힌 남유진 전 구미시장 인터뷰 기사를 전면 기사로 기획 보도했다. 이보다 앞선 1월 2일자에서는 경북도지사 후보자 7명에 대한 지지율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했다. 그럼에도 이 신문은 남유진을 제외한 다른 후보에 관해서는 올 들어 2월 말까지 같은 기획으로 다루지 않았다.

충북일보는 2017년 10월 16일자 5면 전부를 할애해 충북교육감 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심의보 충청대 교수의 인터뷰 기사를 싣고 이를 요약한 스트레이트 기사를 1면 사이드 톱으로 보도했다. 이 기사가 작성된 시점에서 충북교육감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은 6~7명에 달했는데 심 교수에게만 이러한 기회를 줬다. 충북일보는 이에 앞서 같은 해 9월 11일자 1면 사이드 톱기사로 정정순 전 충청북도 행정부지사의 2018년 지방선거 청주시장 출마 가능성을 보도했다. 이 기사가 작성된 시점에서도 청주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은 10여 명에 달했다.

충청일보는 2017년 12월 21일자 1면 주요 기사로 한국당 충북지사 후보가 3파전으로 압축됐다고 전하면서 객관적인 근거 없이 박경국 후보를 유력



특정 후보만 부각한 보도. 독자에게 대표적인 권언유착 사례로 비치는 기사 유형이다. (출처-필자 제공)

후보로 보도했다. 박 후보의 사진만 싣고 “풍부한 도정·행정 경험” “성공신화의 주인공”으로 부각했다. 다른 경쟁 후보에 대해선 짧게 언급했을 뿐이다.

엉터리 여론조사와 위험한 판세 분석

언론의 선거 판세 분석은 정확한 여론이라 볼 수 없는 여론조사 결과와 유권자의 정서, 반응 등을 토대로 비과학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암암리에 언론의 정파성도 개입되고 있다. 특정 선거구에 대한 판세 분석이 언론에 따라 제각각인 이유다. 충청투데이는 2017년 11월 8일자 3면 기획시리즈로 ‘지방선거 누가 뛰나’ ‘세종교육감’ 편을 다뤘다. 기사는 객관적인 근거 없이 “최고진 교육감이 다자대결을 펼칠 경우 승리가 유력한 상황”이라고 보도했다. 게다가 편집자는 기사 내용을 확대 해석해 큰 제목을 “확실히 유리”로 달았다. 이러한 유형의 판세 분석 보도는 선거 막바지로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다. 혼탁한 선거를 언론이 부추기는 셈이다.

선거 기사에 기자 개인의 의견이 반영된 주관적인 표현도 문제다. ‘의외의’ ‘예상을 넘는’ ‘기대에 못 미치는’ ‘압도적’ ‘거침없는’ ‘돌풍’ ‘태풍’ 등과 같은 표현의 기사와 제목은 객관적인 사실을 전달하는 보도 기사에 적합하지 않다.

2016년 4·13 총선 이후 엉터리 여론조사에 대한 비난과 책임이 빚발쳤다. 상당수 지역에서 예측과 결과가 어긋나면서 여론조사가 민심을 반영하기는커녕 거꾸로 갔다는 호된 비판이 이어졌다. 이에 대한 반성의 결과물이 2016년 12월 신문협회와 기자협회 등 5개 언론단체의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 제정이다. 신문윤리위는 이 준칙을 적용해 2017년 대선에 이어 2018년 6.13 지방선거 여론조사 보도를 심의하고 있다.

여론조사 보도에서 가장 많은 제재를 받은 것은 오차 범위 내 여론조사 결과를 서열화하는 경우다.

2017년 대선 때는 중앙일간지를 중심으로 이러한 위반 사례가 많았다. 그러나 올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신문들의 위반 건수가 부쩍 늘었다. 지난 1월 한 달 동안 보도된 기사를 심의한 결과 경북매일, 경북일보, 매일신문, 부산일보, 영남일보, 전남매일, 충청투데이 등 7개 지역신문과 서울신문이 오차 범위 내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면서 순위를 매겨 ‘주의’ 처분을 받았다. 4월 심의에서도 충청도교육감 선거와 청주시장 선거 후보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한 충청매일이 같은 내용으로 제재를 받는 등 ‘오차 범위 서열화’는 끊이지 않고 있다.

주의할 점은 여론조사를 통해 얻은 수치가 곧 여론 그 자체는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여론조사 결과를 여론과 동일시하거나 수치에 과도한 의미를 부여해선 안 된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오차 범위 안에 있는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어떻게 보도해야 할까. 우선 △후보 간 순위를 매기거나 서열화하지 않고 ‘경합’ 또는 ‘오차 범위 내에 있다’고 보도해야 한다. △‘오차 범위 내에서 1, 2위를 차지했다’거나 ‘오차 범위 내에서 조금 앞섰다’ 같은 표현은 사용해선 안 된다. △‘오차 범위 내’라는 별도 표시 없이 수치만을 나열해 제목을 뽑아선 안 된다.

선거 보도에서 전체 표본 오차를 하위 표본에도 그대로 적용해 보도하는 경우도 상당하다.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더라도 지역별 연령별 분석에서는 표본이 수백 명 혹은 수십 명 규모로 줄어들고, 그만큼 오차 범위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일부 신문은 이를 무시하고, 보도했다가 제재를 받았다.

경북매일은 경주시민 1006명을 대상으로 경주시장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면서 전체 표본보다 줄어든 300명 미만의 지역구별 여론조사 결과를 전체 조사의 표본 오차를 적용해 보도했다. 하위 표본이 줄어든 만큼 오차 범위가 커지는 것을 감안하지 않았다.

공표할 수 없는 여론조사 자료를 인용하는 보도도 있다. 한겨레가 2017년 2월 6일자 1면에 보도한 “문재인, 다자·양자 모두 1위…안희정도 급상승” 제목의 기사는 2월 3~4일 여론조사 결과와 같은 곳에서 실시한 2016년 12월 28~29일 조사 결과를 비교한 것이다. 그런데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기사에 인용된 2016년 조사에 대해 ‘공직선거법’과 ‘선거여론조사기준’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고 결정한 바 있다. 그럼에도 한겨레는 이를 인용했다.

헤럴드경제는 2017년 2월 13일자 6면에 “文 40% vs 안희정 33%/후보적합도도 접전 양상” 제목의 기사를 보도하면서 리얼미터의 2월 1주차와 2주차 대선주자 지지율 조사 결과 추이를 보여주는 그래프를 실었다. 주 단위로 지지율 추이를 분석하려면 조사 방식과 표본이 같아야 한다. 그러나 두 조사는 유선 ARS, 무선 ARS, 무선전화 면접, 스마트폰 앱 조사 비율이 각각 달랐다. 당연히 오차 범위도 다르다. 서로 다른 조사 방식으로 진행된 결과이기에 비교 자체가 무의미한데도 헤럴드경제는 아무런 설명 없이 그래픽으로 추이를 보도했다.

지역감정 조장하는 진짜 이유

지역신문이 선거를 앞두고 지역감정을 자극하는 보도는 끊이지 않고 있다. 대구신문은 2월 1일자 1면 톱기사로 정부 지원을 받아 추진해야 할 각종 사업이 줄줄이 무산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하면서 큰 제목을 “되는 게 없는 대구’ 정권교체 실감나네”라고 뽑았다. 또 작은 제목을 “주요사업 예타 줄고배…‘잃어버릴 10년’ 우려” “文정부 들어 연결고리 끊겨 지역 홀대 현실화”로 달았다. 정권 교체로 주요 사업이 좌절되고 있고, 대구 지역 홀대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단정적인 내용이다. 하지만 기사 본문에는 이를 뒷받침하는

“지역신문이 선거 시즌에 지역주의에 편승하는 것은 경제적 이득을 얻기 위해서일 가능성이 높다. 지역감정을 자극함으로써 지방 권력에 도움을 주고, 지방 권력은 광고 시장에 개입하거나, 언론의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는 구조가 형성돼 있다는 지적이 많다.”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따라서 이들 제목은 기사 내용을 과장했고, 지역 주민들의 피해의식과 지역감정을 자극하는 선정적인 내용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지역신문이 선거 시즌에 지역주의에 편승하는 것은 권언유착에 따른 경제적 이득을 얻기 위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 지역감정을 자극함으로써 지방 권력에 도움을 주고, 지방 권력은 광고 시장에 개입하거나, 언론이 벌이는 다양한 행사와 사업 등을 지원하는 구조가 형성돼 있다는 지적이 많다. 출마 예정자나 특정 후보를 일방적으로 비판하면서 답변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대경일보는 1월 10일자 1면에 보도한 “현직 이용해 선거관련 행보/경북도 고위직 공무원 ‘눈총’” 제목의 기사를 통해 지방선거에 출마 예정인 김장주 행정부지사와 우병운 경제부지사의 선거 관련 행보를 비판했다. 기사는 이들의 사전 선거운동 의혹도 제기했다. 그럼에도 이들의 해명이나 반론을 반영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선거를 앞두고 언론의 후보 검증은 후보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유권자의 표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언론의 후보 검증은 상식의 범위 내에서 심도 있고, 공정하고 균형 있게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일부 언론은 억지 검증에 나서 지적을 받았다. 아시아경제는 19대 대선을 앞둔 2017년 4월 13일자에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검증 차원에서 안 후보의 동생이 1984년 대구한의과대학 성적 조작 사건 당사자로 밝혀졌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했다. 그러나 안 후보 동생의 ‘성적 조작 사건’이 후보 검증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사인지에 대해서는 생각할 여지가 있다. 당시 서울의대에 재학 중이던 안 후보가 사건에 관여했는지 여부가 분명치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신문윤리위는 “당시 사건 상황에 비춰 안 후보에게 부모나 동생의 행위에 대해서까지 책임을 묻는 것은 언론사가 해야 할 검증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보는 것이 상식적”이라고 지적했다.

정파 저널리즘과 뉴스의 신뢰도

한국언론진흥재단이 2017년 언론계와 학계 전문가 15명에게 현재의 저널리즘 상황에 대한 인식과 대안을 물었다. 9명은 언론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정파성을 꼽았다. 8명은 현재의 언론 상황을 개선하는 데 가장 우선해야 하는 것으로 공정 보도를 통한 신뢰성 회복을 들었다. 선거 보도에 정파성만 견어내도, 언론은 지금과는 다른 대접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올바른 선거 저널리즘은 작은 실천에서 구현된다. 📰

표 선거 보도의 위반 유형과 관련 규정		
유형	위반 내용	관련 규정
인물 부각	특정 정치인 홍보 기사	정치권력으로부터의 자유
선거 판세	정확하지 않은 선거 판세 분석	사실과 의견 구분
여론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오차 범위 내 서열화 하위 표본 오차 범위 미산정 공표 불가 여론조사 인용 조사 방법 다른 결과 비교 	여론조사 보도준칙
지역주의	지역감정 부추기는 보도	차별과 편견 금지
후보 비판	일방적 비판 답변 기회 안 줘	답변의 기회
후보 검증	편향된 후보 검증	보도와 평론

(출처=필자 정리)